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 과제 질의서

1. 귀 후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총 40개 단체가 함께하는 상설연대체로, 지난 2008년 결성된 이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무지개행동은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아 서울시가 추진해나가야 할 성소수자정책에 대한 제안을 함과 동시에 각 후보들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4. 보내주신 답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정책선거를 위하여 2021년 3월 19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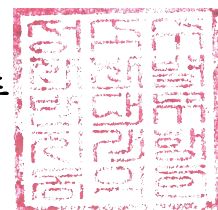
○ 회신처 : (메일) [lgbtqact@gmail.com](mailto:lgbtqact@gmail.com) 또는 (팩스) 02-744-7916

※ 첨부 1. 질의서

첨부 2. 정책제안서

2021. 3. 1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질의서>

1.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모든 시민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는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을 주요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39.4%만이 ‘성소수자를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하는 등 아직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후보께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3. 다음 각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정책의 세부 내용은 이하의 정책 제안서 참조)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2) 주거, 복지,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동성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의 권리 보장

3)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 방지 및 지원

4) 모든 시민을 배려·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5) 시립병원에서의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방지 및 인식개선, 인권교육 실시

6) 시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있어 성소수자에 미치는 영향을 필수적으로 확인

7) 서울시 공무원, 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정책 제안서>

<b>1</b>	<b>「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b>
----------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2014년 다양한 권리에 대한 서울시와 시민이 지향해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따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진행함. (인권헌장 마련에 대한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12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그렇지만 2014. 12. 10.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5개월 동안의 논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 시킨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있다’ 는 이유로 선포하지 않음. 특히 당시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시민들이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 이 무산되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김.
- 서울은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로서 많은 성소수자 역시 서울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8.1%가 서울에 거주하고 51.5%가 직장 소재지가 서울이라 응답함. 2000년부터 21회째 개최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서울시의 대중 축제가 되었음.
- 그럼에도 성소수자 행사를 이유로 수련관, 체육관 등 시설 대여를 거부하거나 법적 성별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가 행정서비스 이용 시 모욕적 이야기를 듣는 등 행정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차별도 지속적으로 발생.
- 또한 서울 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

민 10명 중 8명은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라 여기는 성소수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에게는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표출하고 있어 실제 수용도는 10명 중 5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힘.<sup>1</sup>

- 서울시 위탁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에 ‘성소수자’ 라는 단어를 사업명에 드러내지 못하는 일도 발생함. 이는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기관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서울시의 눈가리개식 행정이 더욱 문제적임.
- 이와 같은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은 결국 서울시가 구체적인 실천 규범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단호하게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대처하지 않고 헌장 선포를 유예한 결과 나타난 것임.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인권헌장 선포가 필요함.

## ○ 정책과제

- 2014년 서울시민 인권헌장 재정 시민위원회가 마련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

---

<sup>1</sup> 서울시민 "소수 문화 인정하지만, 직장동료로 동성애자·탈북민은 싫다" 헤럴드경제, 2021. 1. 8.자.

##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동거 중인 동성 부부가 주거, 의료, 노동 등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였음. 해당 설문조사의 참여자 366명 중 62%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조사에 의하면 주거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참여자 중 76.4%가 주택의 명의를 공동명의가 아닌 한 사람의 명의로 했고, 그 이유로는 많은 이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위해서라고 답함. 또한 파트너와 동거 중 본인 또는 파트너의 수술 또는 입원으로 병원을 이용한 참여자들 중 81.8%가 입원 또는 수술 동의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의료이용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였음. 그밖에 노동과 관련하여 66.7%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파트너가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고, 51.1%가 ‘경조사 휴가/비용에서 파트너가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7.4%가 ‘가족수당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함.<sup>2</sup>
- 2019년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는 서울시 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비혼/독신, 동거커플 증가에 따른 이성애 혈연가족 내부의 변동이 심화 속에서 혼인/혈연 중심의 법적 가족이 아니지만, 실제로 가족과 다름없는 친밀감과 돌봄의 기능을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족(비혼 동거커플, 비혈연 생활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가족들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함.<sup>3</sup>
- 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역시 가족인식과 가족 형태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돌봄과 경제적 협력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존 제

<sup>2</sup> 가구넷, [보도자료] “1,056명의 성소수자가 동성커플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2019. 11. 13.자  
<http://gagoonet.org/?p=24668>

<sup>3</sup> 가족구성권연구소 수행,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2019.

도로 부터 소외 받지 않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제도적 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반자 등록제 실시로 실질적 관계 증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도쿄도 시부야구, 오사카시 등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조례, 요강 등을 통해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대만의 경우도 2019년 동성혼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타이페이시, 카오슝 시 등 주요 도시에서 동성파트너십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 왔음.

### ○ 정책과제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 제정 :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혼인/혈연 가족 제도에서 배제된 비혼 동거 가족 등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 (동성 부부 포함)들이 다양한 가족형태로서 존중 받고 차별 없이 주거, 문화, 복지, 건강, 안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족 지위 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
- 서울시 생활동반자 등록제 시행 :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비혼/비혈연 가구 생활자들이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서울시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 돌봄의 권리와 경제적 권리 해당사항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
- 시립병원 이용에 있어 다양한 가족들이 의료 보호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혼, 혈연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장사 등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것
- 서울시 주거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주택자금 지원 사업 대상을 법률혼 부부만이 아닌 동거, 동성 부부들이 포함되도록 할 것
- 서울시 산하 공무원/준공무원들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가족휴가 대상을 확대할 것
- 가족 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6월 경 서울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퀴어문화축제는 매년 그 참가자 수가 증가하여 2019년에는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수만 명의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로 성장하였음.
-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2015년 제16회 퀴어문화축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2000년도부터 개최되었고 이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숨죽여야만 했던 성적소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건네는 계기가 되고, 서로 교류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자리이며, 사회적 차별에 굴하지 않고 더욱 활기찬 문화적 행사로 응답을 하는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럼에도 퀴어문화축제는 매년 개최 시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반대집회가 열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2015년부터 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서울광장은 조례에 따라 신청만 하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임에도 서울시가 항의집회를 이유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관련 업무가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시민위원회 심의 회부는, “반대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들이 주체가 된 행사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 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sup>4</sup>
- 한편 퀴어문화축제 외에도 성소수자 단체에서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을 예약한 것인 미풍양속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여성성소수자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체육관 대관을 취소하여 서울시 인권위, 국가인권위에서 시정권고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

<sup>4</sup>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2019. 9. 26.자



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는 2017. 5. 1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서울시립 시설 이용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권고하였음.<sup>5</sup>

- 2016년 캐나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참여하고, 2019년 뉴욕 퀴어퍼레이드에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이 참여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이미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공간의 상징으로서 자리잡고 있음. 그럼에도 아직 성소수자 행사에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참여는 커녕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은 문제적이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 ○ 정책과제

- 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행사를 위해 시립시설을 이용·대관함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의 상징으로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지원 및 공식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할 것

<sup>5</sup> 「시설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권고」, 2017. 5. 12.자

##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서울시는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음. 해당 조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 라는 비전 아래 ①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②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운영 ③성공모델 개발 축적 ④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sup>6</sup>
-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임. 문제는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 논의에 있어 트랜스젠더 등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공중화장실 등 시설이용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무하다는 점임. 2020년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9명 중 241명(40.9%)가 “지난 12개월 동안,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함. 또한 231명(39.2%)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212명(36.0%)가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고 하였음. 화장실 이용 시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4명)도 있었음.<sup>7</sup>
- 이처럼 트랜스젠더 등은 성별에 따라 분리된 공중화장실 이용 시 다양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마주함. 따라서 공공부문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는데 있어 이러한

<sup>6</sup>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 서울공공시설에 의무적용”, 2020. 9. 7.자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94855>

<sup>7</sup> 홍성수 책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0, 218~219쪽.

성별분리 공간을 재구성하여 (성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D.C. 등에서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화장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각 지역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가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함.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 관련 연구에서는 성중립화장실 설치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이용 보장과 범죄율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음.<sup>8</sup>
- 한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실제 모습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낯선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우선적으로 일부 공공시설에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서울시는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정책과제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및 종합계획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할 것
- 공공시설에 (성중립적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

<sup>8</sup> Myth #3: Letting trans people use the bathroom or locker room matching their gender identity is dangerous, Vox, 2018.11.14. <https://www.vox.com/identities/2016/5/13/17938102/transgender-people-bathrooms-locker-rooms-schools>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08명 중 24.6%가 HIV 감염을 이유로 약속된 수술을 받지 못했고, 40.5%가 수술이나 입원 시 별도의 공간이나 기구를 이용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남. 의료인에게서 동성애 등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발언을 들은 경우도 21.6%로 나타났음. 이렇게 만연한 차별로 인하여 응답자의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 고 했으며, 34.0%가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함.<sup>9</sup>
- 이러한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은 서울시립병원에서도 발생한 바 있음. 2015. 5. 한 HIV 감염인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스케일링을 예약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진료 거부를 통보 받는 일이 있었음. 또한 해당 감염인이 재차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파티션과 주변 공간, 의자 등이 전부 비닐로 덮인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음.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보라매병원의 이러한 행위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병원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음.<sup>10</sup>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위와 같은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하였음.<sup>11</sup>
- 이후 2018년 서울시는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3개 시립 병원에 배포함.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분명 긍정적이거나 문제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이행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임. 가령 2020년 5월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코로나19

<sup>9</sup> 장애여성공감 수행, 감염인(HIV/AIDS)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sup>10</sup> 서울시민인권보호관 2016. 8. 9.자 15인지-1, 15신청-104(병합) 결정

<sup>11</sup>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6.자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이태원 방문자들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특별히 HIV 여부를 확인하거나,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HIV 감염인이 병원들의 거부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제정·배포를 넘어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정책과제

- 서울시가 2018년 제정·배포한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모니터링,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 HIV/AIDS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을 포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자료 배포, 캠페인 등을 할 것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2016년 6차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 8조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2019년 1월 인권영향평가팀을 신설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자치법규를 구체화 한 행정청 내부 준칙으로서 지침·편람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정책 등이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방지 또는 완화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서울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울시가 지침·편람을 작성할 때 인권정책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유의사항을 도출하는 과제를 갖게 됨.
- 인권영향평가는 검토 대상으로 (1)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침·편람, (2) 일반적인 인권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침·편람, (3) 절차적·기술적 내용 등을 담은 지침·편람으로 구분함. (1)의 지침·편람에 대해서는 인권 취약계층 평가단이 참여하는 가중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하지만 취약계층의 항목에는 여성,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이주·외국인, 장애인으로 두고 있으나 여기에 성소수자는 포함되지 않음. 더구나 인권영향평가제도 전체 내용에서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고려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음.<sup>12</sup>
- 성소수자는 서울시정이 인권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반대의 명목으로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음. 이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침해를 묵인할 뿐 아니라 지자체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성소수자를 누락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냄. 시정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완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인권영향평가제도에

<sup>12</sup> 2020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결과 보고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2422>

서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묵인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음.

○ 정책과제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에 성소수자에 미치는 영향을 필수적으로 확인할 것
- 취약계층 평가단에 성소수자를 구성원으로 넣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지난 2018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한바 있음. 그 내용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등 여러 업무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 또한 차별·오해·편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목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현장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상황임. 가령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97명 중 12.5%가 ‘공무원이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질문을 들었고’, 10.5%가 ‘불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함.<sup>13</sup>
- 서울시 공무원에 의해 직접적인 혐오선동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2020. 5. 이태원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서울시 소속 한 공무원이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한 바 있고, 위 공무원을 포함 17명의 공무원이 2019년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담긴 주장을 펼쳤음.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행위를 모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으로 보고 서울시장에게 대응마련 등을 권고하였음.<sup>14</sup>

<sup>13</sup> 홍성수 책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0, 220쪽.

<sup>14</sup>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2020. 10. 16.자 20신청-64, 20신청-65, 20신청-66(병합)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 위와 같은 일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들이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공무원/준공무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행정업무를 하지 않거나 혐오·차별선동을 하지 않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 ○ 정책과제

-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성소수자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 다양한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 서비스에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